

의안번호	제 1035 호
의결 연월일	년 월 일 (제 회)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건의안

제안자	정책복지위원장
제안연월일	2022년 4월 23일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건의안

의안 번호	1035
----------	------

제안연월일 : 2022년 4월 23일

제안자 : 정책복지위원장

1. 제안이유

- ‘더 이상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추진하던 윤석열 당선인이, 정부 조직개편을 미루며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를 발표하였음. 그러나 당선인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여성가족부장관이 성평등 부처의 해체를 주관하는 불상사가 초래될 것임. 이는 윤석열 당선인이 주장하는 공정과 상식에도 반하며 25년여에 걸쳐 쌓아온 국가차원 성평등 추진체계의 붕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 성평등 실현은 여성과 남성 중 누가 이기고 지는 시소게임이 아닌, 국민통합과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 국민 개개인의 조화롭고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적인 가치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자산임.
-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정책, 가족정책, 청소년 정책 등을 통해 여성과 남성이 서로 존중하고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음에도 성불평등 현상은 여전하며 젠더를 기반으로 한 차별과 폭력이 일어나고 있음.
성평등 문제를 근본적이고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책임과 권한을 가진 컨트롤 타워로서 여성가족부의 존치 및 위상 강화는 필수적 요소임.
- 이에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여성과 남성이 서로 존중하며 공존할 수 있는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여성가족부가 독립부처로 존치해야 하며, 오히려 국민통합을 위해 더 이상 갈등과 반목이 아닌 소통과 공정에 기반한 성평등 부처의 위상 강화 및 관련 제도 정비를 적극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2. 붙임 : 건의안

3. 보낼 곳 : 대통령(청와대), 대통령 당선인, 국회의장,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대표,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건의안

윤석열 당선인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철회하고, 제도를 개선하여 성평등 추진체계의 강화를 적극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후보는 “더 이상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 “여성가족부는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고 주장하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선 이후에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통해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했습니다.

지난 4월 10일, 정부 조직개편을 조급히 결정하지 않겠다며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를 발표하여 공약 이행을 유보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당선인이 구조적 성차별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는 한, 향후 추진될 여성가족부의 조직개편은 정부 차원의 성평등 추진체계를 와해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 여성가족부는 소명을 다했다’는 말은 공공연한 차별을 부정하고 차별을 공적 문제로 다루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당선인의 주장과는 반대로, 여러 지표들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성차별과 성불평등이 여전히 존재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WEF) 보고서(‘21)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성(性)격차지수¹⁾는 156개국 중 102위에 그치고 있으며,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2013년부터 매년 발표하는 유리천장지수²⁾도 OECD 29개국 중 10년째 꼴찌입니다. 성별 임금 격차도 OECD 평균 12.5%에 비해 31.5%로 최하위입니다.

1) 성(性)격차지수: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여성인권과 남성인권의 차이를 측정하여 매년 발표하는 지수로 경제, 교육, 보건, 정치의 네 분야 14개 지표에 대한 남녀비율을 가중평균해 결과를 산출함.

2) 유리천장지수: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가 2013년부터 OECD회원국(29개국)을 대상으로 직장 내 여성차별 수준을 평가해 발표하는 지수로 ▷간부직 내 여성 비율 ▷관리직 내 여성 비율 ▷성별 간 고등교육 비율 ▷성별 간 경제활동참여율 ▷여성 경영대학원시험 응시자수 ▷양육 비용 ▷여성 육아휴직 ▷남성 육아휴직 ▷의회 내 여성 비율 ▷성별 간 임금 차이 등의 10가지 지표를 가중평균해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산출함.

역사적으로 이어져 온 가부장제는 여성을 균등한 기회로부터 소외시켰으며,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의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성역할의 고정관념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생계부양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강요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하였습니다.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성불평등 인식의 잔재는 아직도 사회, 제도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성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행을 위해 권한과 책임을 가진 컨트롤 타워로서의 독립된 전담부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만을 위한 부처가 아니라,
여성과 남성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필수 부처입니다.**

여성가족부는 1998년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로 시작하여 2001년 여성부로 출범 이후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한부모·다문화가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하였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지원, 일·가정 양립지원 등의 정책집행과 정부 내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예산, 성별영향평가 등 성평등 정책을 관리하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한 성차별을 해소하여 남성과 여성이 행복한 사회 실현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선 직후 포털사이트에는 ‘여가부가 진짜 폐지되느냐’는 질문이 폭발적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는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학교 밖 청소년들의 다급하고 절박한 외침입니다.

세계 국가들 사례를 보면, 성평등 추진 기구를 독립부처(부청)로 둔 곳이 2008년 107개국에서 2020년 기준 160개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OECD 회원국 중 성평등 수준이 높은 독일, 캐나다 등 주요 20개국도 장관급 부처를 두고 성평등 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등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는 독립부처의 필요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추세에도 불구하고, 공론화를 통한 합리적 대안 도출이나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부처의 폐지나 기능별 부서로의 재배치를 운운하는 것은 과거로의 퇴행이자,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갈등 요인이 될 뿐이며, 윤석열 당선인이 주장하는 공정과 상식에도 반하는 일입니다.

성평등 실현은 여성과 남성 중 누가 이기고 지는 시소게임이 아닙니다. 사회 구성원인 여성과 남성 모두가 조화롭게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유일한 가치이자, 국민통합, 개개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 모두가 공유하고 확장해 나가야 할 미래 자산입니다.

더욱이 한국 사회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출산율과 가장 빠른 고령화율로 인해 지속가능성의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인도 저출산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더라도 저출산 문제의 완화나 극복은 성평등을 향한 국가의 정책적 노력 없이 이루어진 경우가 없습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도 성평등 가치는 한국사회에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디지털 성폭력 또한 성평등 정책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폭력 대응체계에 새로운 과제를 던져 주고 있으며, 젠더 구조의 이해에 기반한 국가의 총력적 노력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대통령 당선인은 지역 균형발전을 강조하였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지역소멸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낮은 출산율 때문만 아니라 청년인구 유출에도 기인합니다. 지역소멸위험지수는 노인 인구수에 대한 2030 여성들의 인구비입니다. 여성들의 일자리와 안전, 일가정 양립을 고려하지 않으면서 지역 균형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는 강화되어야 합니다.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미래, 그리고 국민 간 통합을 고려할 때 성평등 가치에 대한 국가의 지속적인 지지 표명이 오히려 필요한 때입니다. 이 중차대한 시기에 성평등 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폐지하여 그 추진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역사와 사회 전반에 커다란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여성가족부는 타 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과 인력(정부예산 중 0.24%, 정원 277명(22))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해체보다는 오히려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책임과 권한을 갖고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전환하는 등 부처의 위상을 강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여성과 남성이 서로 존중하며 공존할 수 있는 성평등 사회실현이 미래 세대를 위한 시대적 사명임을 강조하며, ‘여성가족부’가 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시급히 정비하고, 더 이상 갈등과 반목이 아닌 소통과 공정에 기반한 성평등 부처로 격상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2. 4. 23.

충청북도의회